

미국, 기후변화협약 동참 가능성

상원 여·야 지도자 동참 결의안 제출 ... 전체회의 통과 불투명

미 상원의 전·현직 외교위원장들이 1월16일 조지 부시 행정부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회기 상원위원장이었던 리처드 루가(공화당)와 현 위원장 조지프 바이든(민주당)은 공동 제안한 결의안에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계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국에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주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 남·북극 등지의 만년설과 빙하 감소, 강력한 태풍, 강우 유형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기후변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루가 전 위원장도 성명에서 “미국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199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유엔기후협약 동참을 요구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상원 전체회의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89개국 중 168개국이 비준했으나 미국 등 일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됐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중국과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율 배당문제를 지적하는 의회의 반대로 비준기관인 의회에 송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영국 일요신문인 옵서버는 1월14일 영국 총리실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교토의정서에 줄곧 반대해온 부시 대통령이 1월 하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존입장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1월16일 토니 스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확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7>